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수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7200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2. 9. 2.

발 의 자 : 박대수 · 구자근 · 김선교
김희곤 · 김용판 · 송석준
안병길 · 이주환 · 임이자
정찬민 · 조명희 · 조은희
지성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과 취소요건을 규정하고,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, 납부기한 전 징수,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또한,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고형연료제품 수입자·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·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구체화하고, 인증 취소요건을 신설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강화함(안 제17조의2).
- 나. 재활용부과금 납부 징수유예, 납부기한 전 징수,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납부·징수 효율성을 제고함(안 제19조).
- 다.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시 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(안 제25조의8).
- 라. 금지명령을 받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·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 체납 시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·징수 효율성을 제고함(안 제25조의11).
- 마. 재활용부과금 및 폐기물부담금 징수 관련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함(안 제37조).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도운영의 효율성, 회수·재활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2.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

제19조에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
2.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
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

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⑨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1. 국세, 지방세,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2.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
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4. 「어음법」 및 「수표법」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5. 경매가 개시된 경우
6. 법인이 해산한 경우
7.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⑩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.

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

⑫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5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

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제25조의11제2항 중 “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”를 “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납세자 인적사항
2. 사용목적
3. 사업장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7조의2(재활용의무이행 인증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 | 제17조의2(재활용의무이행 인증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도운영의 효율성, 회수·재활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 <u>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</u> <u>1. 제1항에 따른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</u> <u>2.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</u> |
| 제19조(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) ①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 | 제19조(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</u> <u>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</u> |

<신 설>

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
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
경우

2.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
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
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
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
되는 경우

⑨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
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
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
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1. 국세, 지방세, 그 밖의 공과금
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
경우

2.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

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4. 「어음법」 및 「수표법」에
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
지처분을 받은 경우

5. 경매가 개시된 경우

6. 법인이 해산한 경우

7.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
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

| | |
|--|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경우</u></p> <p>⑩ <u>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.</u></p> 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⑪ <u>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</u></p> 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⑫ <u>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및 채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|
| <p>제25조의8(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) ①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| <p>제25조의8(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</p> |

